오류·부실·왜곡…선생님들 “어떻게 이런 교과서로 가르치나”

문제 투성이 ‘국정 역사 교과서’

‘독립운동’ ‘5·18’은 축소
유신 체제·박정희는 미화
사건 비중 무시하고 단순 나열
학생들 공부하기 어려워

교육부가 지난달 공개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

■광주지역 역사교사들이 분석한 국정 교과서(고교) 문제점

항일 의병 (189쪽)	호남 의병이 항일 의병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서술하지 않음
광주학생 항일운동 (220쪽)	-댕기머리 사건 때문에 항일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서술 -성진회를 독서회 중앙 본부로 바꿔야 함 -전국 확산 194개 학교에 대한 서술이 320개로 정정돼야 함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이 ‘광주학생항일운동 기념비’로 잘못 표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해외까지 확산됐다는 서술이 없음 → 역사적 의의 축소
유신 체제 미화 (268쪽)	새마을 운동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서술, 부정적 서술은 1줄에 그침.
5·18 민주화운동 (270쪽)	-“과잉 진압”, “가혹한 진압”, “계엄군의 발포로 많은 시민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였다”로만 계엄군의 폭력을 간략히 서술 -시민군에 대한 서술이 없고, 시민 자치 공동체에 대한 서술도 없음 -5·18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내용도 기술하지 않고 단순 사진·설명글로만 대체 -5·18이 1980년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서술하지 않음

■국정-검정교과서 일제강점기 서술분량 비교

(단위:쪽, 괄호 안은 쪽 수)

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미래엔
232~299(68)	286~357(72)	208~259(52)	262~327(66)	236~303(68)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국정교과서	
262~339(78)	274~339(66)	238~299(62)	202~245(44)	

〈자료:역사교육연대회의 제공〉

‘함량 미달’, ‘세금으로 만든 불량품’, ‘학생들에게 고통 주는 교과서’, ‘사실 오류가 부지기수인 교과서’….

교육부가 지난달 공개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國定)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을 훑어본 교육·역사학계가 한 목소리로 폐기를 촉구했다. “어떻게 이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나”는 한탄도 터져나왔다.

역사교육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광주지역 역사교사모임 등은 현장검토본과 ‘원고본 외부검토보고서’를 분석,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다만 교사들은 정부의 국정 교과서 ‘빨간 펜’ 역할을 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으로 사례를 공개하진 않았다. 앞서 알려진대로 5·18 민주화운동 및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축소·왜곡 사례 외에도 ‘오류 투성이’인 현장검토본의 부실, 왜곡·편향 서술 사례를 살펴봤다.

◇학생 부담 늘린 “실패한 교과서”=광주지역 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들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총론부터 ▲전근대 ▲지역사 서술 ▲근현대 분야로 나눠 분석한 뒤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2015 교육과정’이 ‘학습량 적정화’를 내걸었음에도 학습 분량이 너무 많다는 게 역사교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기준으로 400페이지 분량을 315페이지로 20% 줄였다는 게 정부 설명. 하지만 2단 편집과 글자 크기를 축소, 실제 본문 내용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게 교사들 설명이다.

특히 현대사의 경우 고교 교과서(264쪽)에 ‘1968년 1월 21일 평양에서 밀파된 특수부대원들(김신조 포함 31명)이 침투해 최규식 종로 경찰서장 사살’, ‘1968년 11월 울진, 삼척 지역에 120여명 무장 공비 침투’, ‘1966년 2월 과학기술분야 종합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 ‘박정희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을 통한 독자적 군사 기술개발 박차(267쪽)’ 등 연도 및 날짜까지 표기하며 세세한 사건까지 언급, 학생들 학습량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실이 열거되면서 맥락을 이어서 나름의 서사를 구성하기 어렵다”면서 “가르치는 교사는 재미없고 배우는 학생에게는 지루한 교과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학생 배려 없는 ‘해설서’ 수준=교사들은 국정교과서의 경우 사건 나열식 서술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학습 핵심 요소와 사건 전후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역사교육연대회의도 비슷한 시각의 입장을 밝혔다.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일제강점기 서술과 관련, “중요한 사건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사실의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다”고 평했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제강점기 생활사 부분이 사라지고 수탈과 저항의 서술로만 채워졌다” 면서 “지난 20~30년 이뤄진 역사학계 연구 성과는 거의 반영하지 않은 시대역행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중·고등학교 교과 내용이 비슷해 ‘중·고교 사이 역사교육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광주지역 역사교사모임과 역사교육연대회의는 ▲고교 교과서(22쪽)와 중학교 교과서(32쪽)에 서술한 청동기 시대 무덤 ▲반민특위(중 2 130쪽, 고 252쪽), 5·16(중 2 141쪽, 고 241쪽) ▲위안부나 유관순 관련 사진 반복 등을 지적했다.

역사교육연대회의는 또 통상 본문 서술과 자료(그림, 도표, 사진 등)간 긴밀도를 높여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도 자료와 본문이 ‘따로국밥’ 형태로 편집됐고 가독성도 떨어지는 문제점을 들어 ‘학생들에게 불친절한 교과서’라고 평가했다.

◇분야별 오류 ‘수두룩’=광주지역 역사교사모임과 역사교육연대회의는 “각 분야별로 잘못 서술된 오류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대표적으로 안중근·안창호에 대한 잘못된 기술이 문제가 됐다.

역사교육연대회의측은 “고교 교과서(190쪽)가 안중근 사진과 유묵을 보여주며 설명 캡션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자서전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서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고교(210쪽)에서 “(통합) 임시정부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총장 안창호 등 국내외의…”로 서술하고 있지만 1919년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안창호 직책은 노동국 총판”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도 의미있는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광주 교사들은 고교(189쪽) 항일 의병 운동과 항일 의거와 관련, “지역별 의병 분포를 비교하거나 호남 의병이 항일 의병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서술하지 않았고 의병 운동 지도에도 호남 의병장 이름이 타지역에 비해 적게 나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제강점기 서술 방식과 관련, “국정교과서에는 ‘친일 인사나 단체’, ‘친일 세력’,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서로 다른 용어가 뒤섞여 있으며 개념 혼용 현상은 집필자가 친일파에 대해 별 생각이 없거나 정리가 되지 않아 여러 개념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현대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위원장은 “261~267쪽까지 박정희만 23회에 걸쳐 언급하는 등 박정희 서술 분량이 압도적”이라며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 교과서”라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역사교사모임 교사들도 “박정희 정부의 안보와 경제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해 정치는 1.7쪽, 안보나 경제성장은 3.3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사 영역에서 박정희 관련 서술(18년)은 크게 늘리는 반면, 6월 항쟁 이후 30년 세월은 4쪽 안팎에 그친 점도 대비되면서 균형성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왜곡된 경제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광주지역 역사교사모임은 “소수의 기업가를 선정해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낮은 이자율로 공급했다”는 식으로 기업에 준 특혜를 미화하는가 하면, 재벌 성장을 위인전 수준 만큼이나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부정적 서술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고 정경유착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등 한 줄로 요약했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주제에 따라 ‘민주주의의 성숙과 경제 구조의 변화’를 다루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책만 설명하고 과오는 서술하지 않는 반면, 박근혜 정부는 국정 지표 표어까지 기술한 점도 균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

남도 관광 전문인력 대학이 키운다…동신대 산학협력사업

‘지역 고유한 관광·문화 자원을 알릴 전문 인력을 키워라.’

동신대가 전남도의 ‘2017년도 산학협력 취업패키지사업’에 선정되면서 내려진 특명이다.

이른바 ‘전남형 글로컬 관광전문인력’을 키워내자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전남을 찾는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전남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자는 의도가 담겨있다.

동신대는 이같은 구상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매년 2억2000만원을 투입 관광경영학과를 중심으로 중국어·관광일본어·컴퓨터학과 등 4개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도문화를 관광자원화하는 아이디어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관광 개척 방안 등 전남 글로컬 관광 경쟁력을 높일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게 된다.

동신대는 또 ▲글로컬관광 산·학 협력 취업시스템 구축 ▲정규 교과과정 학사제도 개편 및 특화교육 실시 ▲전남 글로컬관광 산·학·연 허브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전남 40여개 관광업체도 참여, 현장에서 활용할만한 아이디어와 마케팅 방안 등을 제안하게 된다.

글로컬 관광·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관광 에이전시 업무나 외국인 관광객 통역 안내 및 해설 서비스 교육, ICT 활용능력 교육 등 분야별 특화과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마케팅이나 가이드서비스, 관광통역안내사보다 더 나아간 외국인환자 코디, 국제회의·전시 전문인력, 관광콘텐츠 어플리케이션 개발 전문가, VR관광 개발 전문가 등으로 인력풀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경용 글로컬 관광전문인력 양성사업단장은 “관광 패턴이 바뀌면서 단체관광에 익숙한 기존 인력으로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적극 산업화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청소년들 “저도 책 냈어요” ‘작가만 책 내나, 나도 작가다.’ 광주지역 19개 초·중·고교생들이 자신의 꿈·희망·이야기를 46종류의 책에 담아냈다. 어엿한 저자(著者)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책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 세번째’라는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극장 일대에서 출판기념회 겸 전시회를 열었다. 시와 소설을 비롯, 교양 과학서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함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최현배기자 choi@